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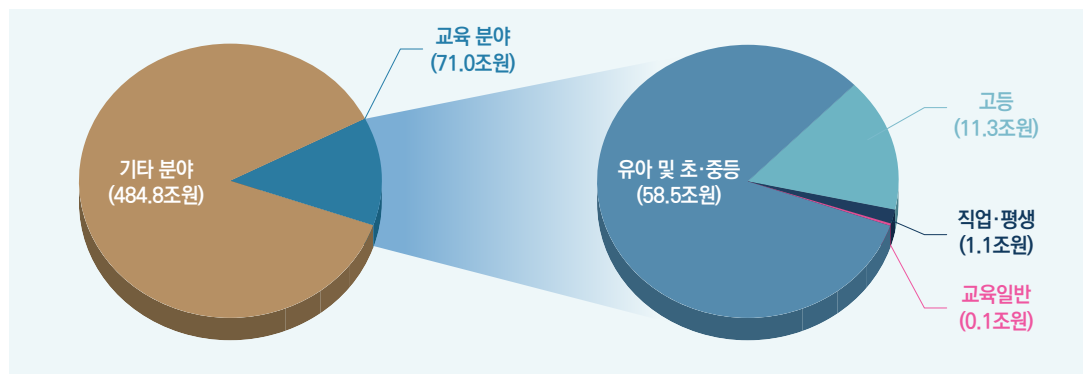
교육재정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

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최준호 예산분석관

2021년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지출

-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지출은 71조원으로, 정부 총지출 555.8조원의 12.8% 수준
 -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58조 4,654억원, 고등교육 11조 3,189억원, 직업·평생교육 1조 1,034억원, 교육일반 1,383억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
 - 교육 분야 지출은 상당 부분 국세수입에 연동되므로,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2.2% 감소

[그림 1] 2021년도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지출의 규모와 구성



- 2021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,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고등교육, 평생·직업교육 등 나머지 부문은 전년 대비 증가
 -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부문은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60조 4,126억원 대비 3.2% 감소
 - 고등교육 부문은 지역혁신 인재육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11조 139억원 대비 2.8% 증가
 - 평생·직업교육 부문과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10조 715억원, 1,365억원 대비 각각 3.0%, 1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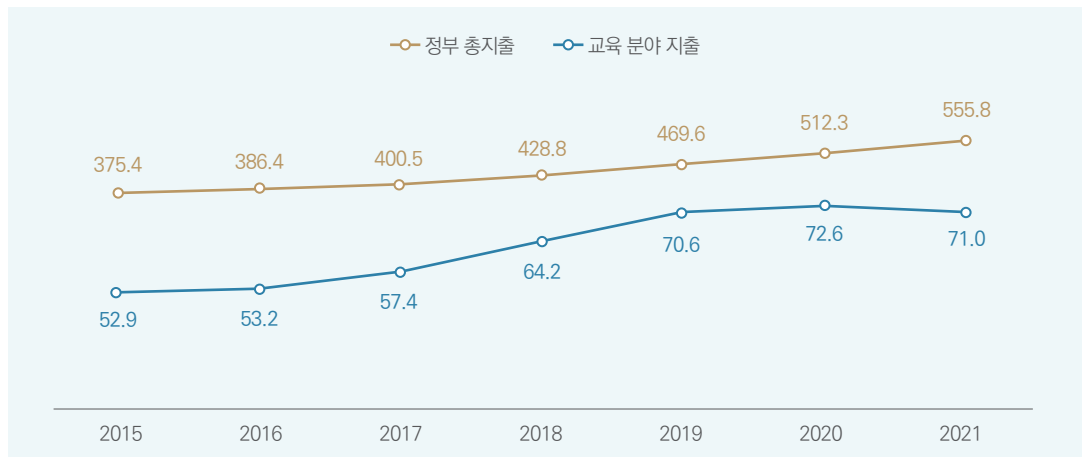
교육 분야 지출의 변화 추이

● 교육 분야 지출은 2021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

-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 지출은 2015년 52.9조원에서 2020년 72.6조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 375.4조원에서 512.3조원으로 증가한 총지출보다 빠르게 성장
 - 2015~2020년 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교육 분야 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6.5%로, 같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6.4%를 0.1%p 상회
- 다만,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전망이 악화되면서 2021년 예산안에서는 소폭 감소

[그림 2] 정부 총지출과 교육 분야 지출의 변화 추이

(단위: 조원)



주: 본예산 기준(2021년도는 예산안 기준)

● 부문별로 보면, 2015~2020년 간 교육 분야 지출의 증가는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부문이 주도

- 2015~2020년 간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부문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이전재원*을 중심으로 연평균 7.8% 증가

*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의 보통교부금·특별교부금·증액교부금,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의 유아교육비·보육료 등으로, 기본적으로 국세수입에 연동되며, '교육재정교부금'으로도 표현

[표 1] 교육 분야 지출의 부문별 변화 추이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5(A)	2019	2020(B)	2021(C)	연평균증가율		
					A~B	B~C	A~C
교육 분야	529,187	706,490	726,344	710,260	6.5	△2.2	5.0
① 유아 및 초·중등교육	414,568	593,832	604,126	584,654	7.8	△3.2	5.9
지방이전재원	(394,056)	(590,642)	(600,633)	(579,200)	(8.8)	(△3.6)	(6.6)
② 고등교육	107,449	102,576	110,139	113,189	0.5	2.8	0.9
③ 평생·직업교육	6,150	8,771	10,715	11,034	11.7	3.0	10.2
④ 교육 일반	1,020	1,312	1,365	1,383	6.0	1.3	5.2

주: 본예산 기준(2021년도는 예산안 기준)

자료: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

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국제비교

●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, 교육재정의 규모는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재정투자 규모 증가

-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모든 학교급에서 재적인원이 감소 중
 - 유아 및 초·중등교육: 2015년 735.3만명 → 2019년 668.3만명(연평균 2.4% 감소)
 - 고등교육: 2015년 360.8만명 → 2019년 332.7만명(연평균 2.0% 감소)
-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1인당 교육재정투자 규모가 확대
 - 유아 및 초·중등교육: 2015년 563.8만원 → 2019년 888.5만원(연평균 12.0% 증가)
 - 고등교육: 2015년 297.8만원 → 2019년 308.3만원(연평균 0.9% 증가)

[표 2] 학교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재정투자의 변화 추이

(단위: 억원, 만명, 만원/명, %)

구분		2015	2016	2017	2018	2019	연평균증가율
지출규모 (A)	유아 및 초·중등	414,568	430,588	471,494	537,165	593,832	9.4
	고등교육	107,449	93,593	94,584	96,742	102,576	△1.2
재적인원 (B)	유아 및 초·중등	735.3	718.6	700.2	682.7	668.3	△2.4
	고등교육	360.8	351.7	343.7	337.8	332.7	△2.0
1인당 투자 (A/B)	유아 및 초·중등	563.8	599.2	673.4	786.8	888.5	12.0
	고등교육	297.8	266.1	275.2	286.4	308.3	0.9

주: 1. 재적인원은 연도별 4월 1일 기준(단, 유아교육은 12월 31일 기준 누리과정 대상 보육인원 포함)

2. 교육 분야 지출은 분예산 기준

자료: 교육통계서비스,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

● 초·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, 고등교육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

-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초등교육 128.8%, 중등교육 129.1%, 고등교육 64.8%
 - 초·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4년부터 OECD 평균을 추월

[그림 3]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변화

(단위: \$ PPP 환산액)



자료: OECD 교육지표(2016) 및 OECD.Stat(2020. 10. 12. 추출)

교육 분야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

● 최근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부문 간 지출 비중, 지방이전재원의 안정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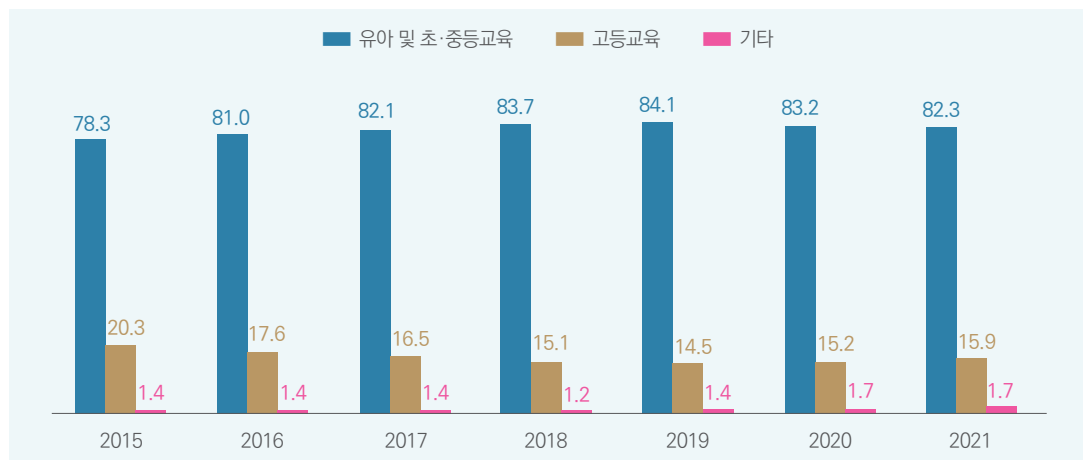
- 상대적으로 재정투자 비중이 낮은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논의가 진행 중*

* 제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」이 발의된 바 있음

- 통계청(2019)은 유아 및 초·중등교육의 학령인구가 2060년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, 고용노동부(2019)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로 인하여 인력수요가 전문과학기술 등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¹⁾

[그림 4] 교육 분야 내 부문별 비중

(단위: %)



주: 본예산 기준(2021년도는 예산안 기준)

-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 실적에 연동되어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등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*을 활용하는 교육청이 증가

*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, 2019년부터 설치

●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,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고등·전문교육으로의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 필요

-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고등교육 부문 투자 확대방안 검토 필요
-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

1) 통계청(2019), 장래인구특별추계; 고용노동부(2019), 2018~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.